

보도시점

2025.9.3.(수) 14:00
(2025.9.4.(목) 조간)

배포

2025.9.3.(수) 09:00

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회의 개최

-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과학기술인재 대책 마련에 총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3일(수),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구성 >

- 위원장(민관공동): 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
 - 위원: 9개 부처(과기·기재·교육·법무·국방·산업·복지·중기부, 특허청) 실장급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력*의 전문가 20여명
- * 국제학전문가, 기업 인력개발(HR) 부문장, 인공 지능 중견기업 및 창업기업, 국내 복귀한인연구자 등

지난 8월12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우수 인재가 의대 등 타 직종으로 유입되거나, 해외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은 현상 등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그 흐름을 어떻게 전환 시킬 것인지, 대책 방안의 전체적인 틀(프레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민간위원들은 단순한 급여 수준을 넘어 자율적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인정 등 총체적으로 이공계에 대한 매력 요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접근을 넘어 기업, 대학, 출연연이 자생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산·학·연 현장 의견과 각 부처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종합하여 마련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을 발제하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추진 전략도 함께 균형 있게 검토하였다.

민관합동 전담반(TF)의 공동위원장인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이 마지막 황금시간(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연구환경, 보상체계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각 부처가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며 “민간 위원님들의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9월 말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안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은 (044-202-4820)
		담당자	서기관	이도연 (044-202-4828)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